SP 2013-9-223

2013 하계대학총장세미나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위기를 기회로!
대학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

일 자 2013. 6. 27(목) ~ 6. 28(금)

장 소 경주 힐튼호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일 정 표

- 일 자 : 2013. 6. 27(목) ~ 6. 28(금) (1박2일)
- 장 소 : 경주 힐튼호텔
- 주 제 : 위기를 기회로! 대학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

제1일(6월 27일)

시 간	내 용	비 고
14:30~15:00	등 록	
15:00~15:30	**개회식** – 개회사 : 서거석 회장 – 신임 총장 소개 – 임시총회	그랜드볼룸
15:30~16:10	**기조강연 : 창조경제와 대학교육**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그랜드볼룸
16:10~16:30	Coffee Break	
16:30~17:30	**교육부장관과의 대화**	그랜드볼룸
18:00~19:30	만 찬	야외잔디밭

제2일(6월 28일)

시 간	내 용	비 고
09:00~10:20	**대학의 주요 현안과제 발표** •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의 대응 및 발전 – 고석규 목포대 총장 • 대학평가체제의 개선 – 신승호 강원대 총장 •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투자 – 김준영 성균관대 총장 • 대교협 현안 브리핑 – 이원근 대교협 사무총장	그랜드볼룸 (※ 대학이 당면한 주요 현안 발표)
10:20~10:40	Coffee Break	
10:40~11:40	**주요 현안과제 토론 및 제언**	그랜드볼룸 (※자유토론 형식)
11:40~12:00	휴 식	객실 Check out
12:00~13:30	**오찬 및 폐회**	그랜드볼룸

목 차

개회사 7

기조강연 11

창조경제와 대학교육 ····· 13
김 광 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교육부장관과의 대화 23

대학의 주요 현안과제 발표 29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의 대응 및 발전 ····· 31
고 석 규 (목포대학교 총장)

대학평가체제 개선 ····· 45
신 승 호 (강원대학교 총장)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투자 ····· 63
김 준 영 (성균관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현안 브리핑 ····· 79
이 원 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주요 현안과제 토론 및 제언 93

개 회 사

서 거 석 회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녹음이 짙어가는 성하의 계절에 소속 대학과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총장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빛내주신 데 대해서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귀한 손님들이 와 계십니다. 먼저 국사로 매우 바쁘실 터인 데도 한국 고등교육 발전이라는 일념으로 총장님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서남수 교육부장관님과 한국대학들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창조경제와 대학교육'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해주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한국 대학들이 처한 위기를 진단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실 여러 총장님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위기를 기회로'입니다. 회원대학 총장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 대학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학령인구 급감현상과 대학 재정의 위기, 글로벌 경쟁의 심화는 대학의 존립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책무성도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면서 대학들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들의 평가에서도 한국 대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는 58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46위였습니다. 기업들은 대학 졸업생들이 인성과 도덕성, 창의성, 리더십이 부족하여 재교육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구 경쟁력을 중심으로 본 세계대학평가에서도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은 세계 수준과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대학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우리 대학들이 기본과 본질에 충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명품커피 스타벅스도 맛과 향이라는 커피의 본질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의 본질은 교육과 연구입니다. 대학 스스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세계 수준의 연구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 왔는지 겸허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2일간 논의될 내용들은 201개 4년제 대학들이 심사숙고하고 대학발전의 에너지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이 창의인재 양성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한국 대학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회원대학들의 입장과 사정이 모두 달라 대교협에 거는 기대가 서로 다르지만 대교협은 회원대학의 어려움을 보살펴드리고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교협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며, 회원대학들로부터 신뢰받는 대교협, 대학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교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지난 4월초 취임 당시 총장님들께 약속드렸던 대학 현안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 대학 총장님들은 물론이고 정부부처와 국회, 경제계의 주요 인사들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소통해왔습니다. 특히 대학 재정의 획기적 확충과 국가장학금 제도 보완, 입시전형 방법 간소화, 대학평가 시스템 정교화, 대학 특성화와 균형발전이라는 이슈에 대해서는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세미나에서 대학이 처해 있는 현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교육과 연구에 충실한 대학, 국민들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한국 대학들이 세계 대학들과의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빕니다.

다시 한번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해주신 회원대학 총장님들과 내빈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 6. 2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서 거 석**

기조강연

- 창조경제와 대학교육 -

김 광 두 원장(국가미래연구원)

창조경제와 대학교육

- 목차 -

Ⅰ. 창조경제의 개념
Ⅱ. 창조경제의 성공조건
Ⅲ. 창조적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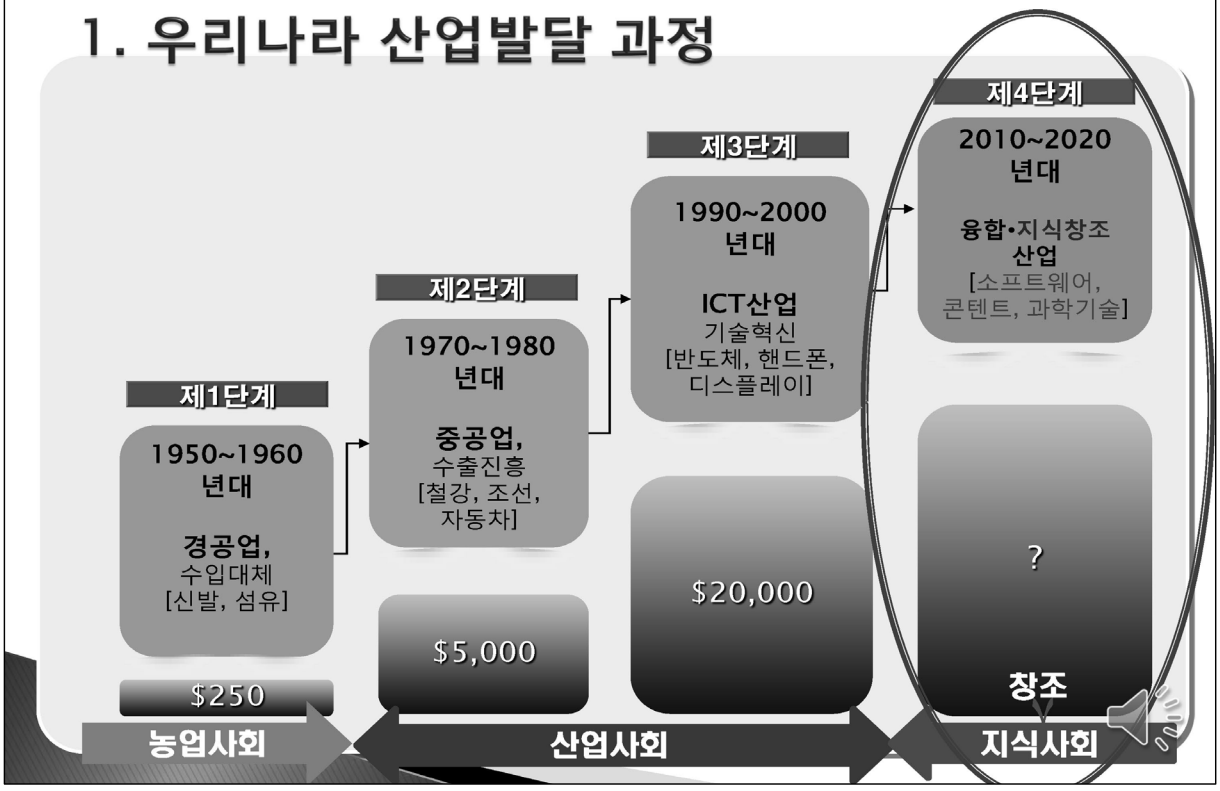
김 광 두 (국가미래연구원장)

1

Ⅰ. 창조경제의 개념

2

1. 우리나라 산업발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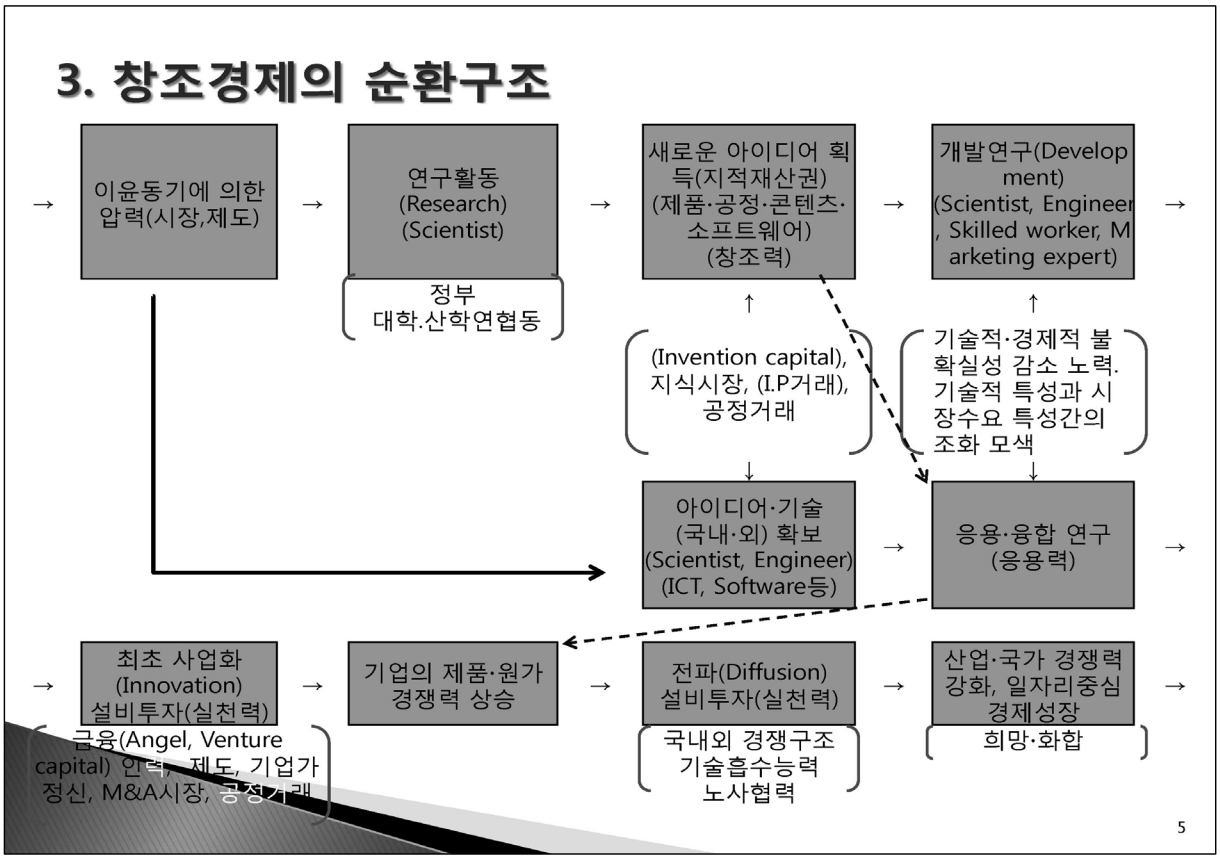


2. 창조경제란?

-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창조력),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존 아이디어의 기존·새로운 기술과의 융·복합(응용력),
새로운 아이디어나 융복합 기술의 사업화(실천력)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대기업 간의 상생구조가 정착되어 일자리 창출형 성장이 선순환되는 경제.
실물자산, 금융자산보다 지식자산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경제.

- 세계경제의 국가간 분업 구조의 동태적 변화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필수 선택

4



Ⅱ. 창조경제의 성공 조건

6

1. 창조경제의 성공조건

1. 거시경제의 안정성
- 창조경제 회임기간 길어 창조활동 뒷받침할 경제력 유지돼야.
- 창조적 활동의 위험부담 흡수 능력 저하 없어야.

2. 창조적 인력의 확보
- 사람 없이 되는 일 없어

3. 공공정보의 공유체제 확립: 정부 3.0 계획 추진

4. 지적 재산권 보호
- 창조적 활동에 대한 보상. 지식자산에 대한 존중. 대기업의 지식탈취 방지. 지식자산 거래 활성화

5. 융합·통섭의 연구·개발·사업화·인프라 구축
- 스웨덴의 Kista Science Park, 핀란드의 Oulu Science Park 등 벤치마킹

7

6. 창업 금융의 원활한 작동
- 기술평가 인력 확보. 정책금융 체계 확립. 요즈마 펀드 벤치마킹

7. 대중소기업 상생구조의 정착
-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인력 탈취, 창의력 보상 제한, 거래·시장 제한 등 사라져야

8. 창의력 저해하는 규제 철폐

8

Ⅲ. 창조적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변화

9

1. 일자리의 개념이 변화한다

산업의 스케일, 조직의 시스템, 기업문화, 근로자의 직업관이 달라진다.

현 재	미 래
1.지역시장(Local markets, operations)	1.글로벌시장(Global markets, operations)
2.제조업 사무직(Manufacturing, clerical work)	2.서비스 지식산업(Service, knowledge work)
3.상하조직(Hierarchy)	3.네트워크(Networks)
4.풀 타임(Full time job)	4.프로젝트당 파트타임(Part-time and project work)
5.정규직원만 근무(Work done by employees)	5.파트타임, 아웃소싱(Work done by many contributors)
6.고정된 일터 출근(Fixed work location)	6.다양한 일터 변화, 이동(Diverse work locations)
7.경영진의 채용 특권(Management prerogative)	7.사회적 일자리(Social licence)
8.충성도 중심(Loyal service)	8.시장지식, 스킬 창의성(Marketable knowledge, skills)
9.일자리를 찾아서("Get a job")	9.삶을 찾아서("Get a life")

김윤정, 한국과학창의재단

2. 인재의 조건이 바뀐다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는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김윤정, 한국과학창의재단

– 미래 인재의 6가지 조건(A whole new mind, Daniel Pink) –

3.

미래대학모습 (하먼,Willis W. Harman)

- 현재 대학은 향후 5년간 서서히 사이버대학(satellite university)로 전환
- 2015년부터 5년 동안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 bookless university로 변화
- 2020~2024년 학생들, 자기주도적 시간계획과 학습계획 수립, 학사일정 없는 대학
- 2025년 이후 전 세계 어디에서나 수강하는 개방대학(all have access university) 발전

김윤정, 한국과학창의재단

4. 창조경제시대 대학교육

❖ Florida, Knudsen, Stolarick:
대학은 혁신(innovation)의 엔진, 창조생태계(creative ecosystem)의 허브(hub)

- 인재의 유입(Brain Gain) 중요: 대학을 중심으로 자석효과(magnetic effect) 창출
- 우리의 WCU(세계수준연구중심대학육성) 사업

❖ 교육, 연구, 문화 네트워크의 허브이자 공동체의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가치 창출자

- 대학이 중심이 되어 적정기술 활용, 지역과 글로벌 공동체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역할담당
- 대학의 사회기여 기능의 확장, 학문연구와 대학생 교육만이 아닌 지역사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 학습 중심 기관
- 초학제적인 주제중심(project based) 토론과 아이디어 창출-시연-실패-재시도-혁신-창조의 실현 공간 크리에이티브 랩(creative lab)이 되어야

김윤정, 한국과학창의재단

5. 대학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1) 3 DS의 창업 프로그램

1. 프로그램 목적 및 3DS 역할

- 목적 : 대학생 창업 활성화, 대학 내 기업가정신 확산 및 창업교육 지원
- 역할 : 창업에 관한 열정과 참신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중인 대학생 선발 → 멘토 및 스폰서 연결 → 투자자 연결 → 창업

2. 프로그램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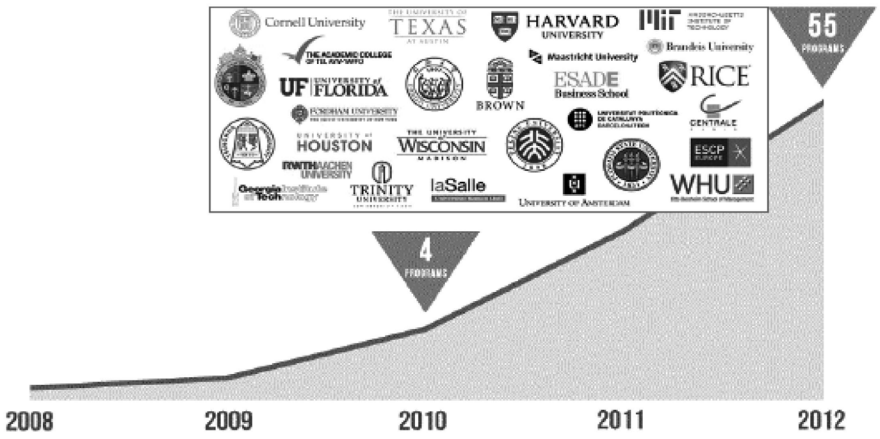
- 사전 프로그램 : 리쿠르팅 및 워크샵
  - 200여명이 넘는 대학생 지원자 중 인터뷰 등을 통해 40여명(Good Idea) 선발

※ Good Idea의 기준
1. 실질적이고(real) 식별가능한(observable) 시장 문제점(market pain)을 갖고 있을 것
2. 사업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을 것
3. 현 시장 및 잠재시장이 커야 할 것
4. 가능한 수익 모델(revenue stream)을 갖고 있을 것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2) 3 Day Startup(3DS) 개요

- 2008년 1월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 대학생 조직으로 설립된 비영리 조직
- 현재 북미를 비롯하여 유럽, 아시아, 남미 등의 대학에서 55개 프로그램 운영 중
  - Harvard University, MIT, Cornell University, Georgia Tech 등 미 전역으로 확대
  - 중국, 칠레, 이스라엘,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포르투갈 등 해외 대학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3) 3 DS의 창업 프로그램

2. 프로그램 진행

- 본 프로그램(3일간 프로그램)
  - 1일차(금요일) : 브레인스토밍, 멘토 오리엔테이션, Initial Pitches, 팀 구성 등

[브레인 스토밍]

  - 2일차(토요일) : 고객 인터뷰 및 시장 조사, 멘토링, Practice Pitches 등
  - 3일차(일요일) : 고객 인터뷰 및 시장 조사, 멘토링, Final Pitches

[고객 인터뷰 및 시장 조사]

[파이널 핏치]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4) 3 DS의 창업 프로그램

3. 프로그램 특징

- Final Pitch에는 성공 사업가, 기업체 임원, 벤처투자가, 엔젤투자가 등이 패널로 참석
  -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질문 및 조언
  - 향후 실질적 투자로 연결

- 대학 내에서 진행하는 방식과 지역 기업 내에서 진행하는 방식의 Two-track 운영
  - 대학 내에서 진행하는 기존 3DS 프로그램은 분야에 상관없이 진행하는 대학생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의 성격
  - 지역기업 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개최 기업의 사업분야에 한정짓는 대신 참가자들이 개최 기업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

※ 지역기업 내 운영 3DS 프로그램(예: 3DS RetailMeNot)

1. 미국 Texas Austin의 RetailMeNot 본사에서 개최(2013. 4. 26 ~ 28)
2. RetailMeNot 은 세계 최고의 온라인 할인쿠폰 정보 사이트로, 본 3DS 프로그램은 온라인 쿠폰과 상거래 분야로 한정
3. RetailMeNot 관리자들이 참가자들의 사업 가능성 및 향후 방향에 대한 멘토링
4. 온라인쿠폰 및 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시장데이터 및 소비자 정보 제공
5. 선발된 창업팀의 경우, 사업 동반자로서 파트너쉽 기회 제공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교육부장관과의 대화

MEMO

MEMO

MEMO

MEMO

대학의 주요 현안과제 발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의 대응 및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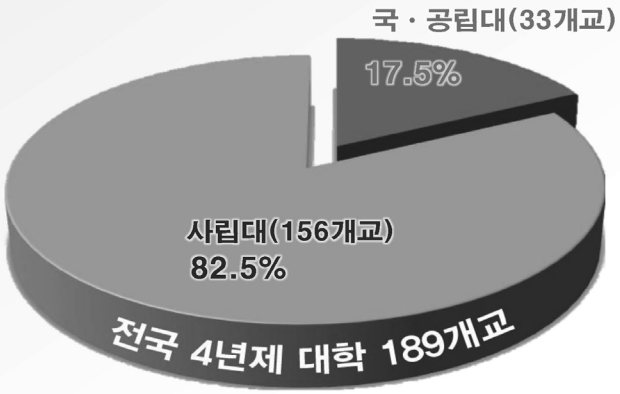
고 석 규 총장(목포대학교)

목 차

Ⅰ 고등교육 현황
Ⅱ 고등교육경쟁력 국제지표 비교
Ⅲ 학령인구 수급현황 및 문제점
Ⅳ 고등교육의 위기와 기회
Ⅴ 대학의 대응 및 발전방안
Ⅵ 기타 정책제언

Ⅰ. 고등교육 현황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주로 사립부문에 의존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부분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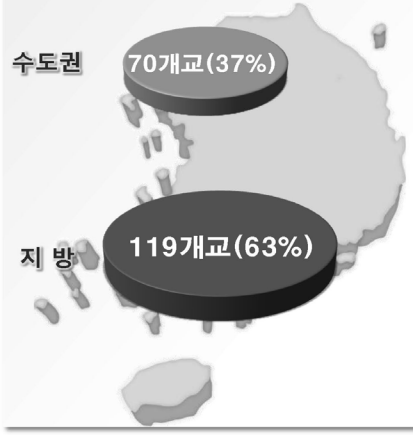


* OECD 국가의 경우 국·공립 고등교육 기관 학생 수가 전체의 약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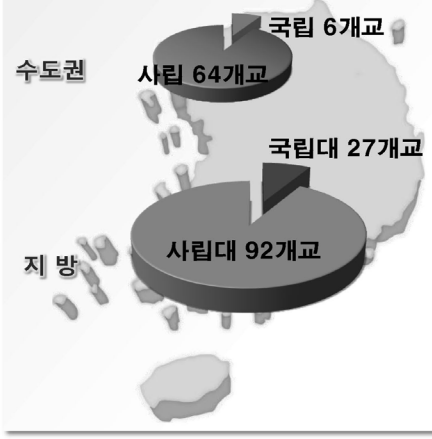
- 1 -

Ⅰ. 고등교육 현황

4년제 대학 63%가 지방 소재



수도권 사립대학 중심
지방은 국립·사립이 병행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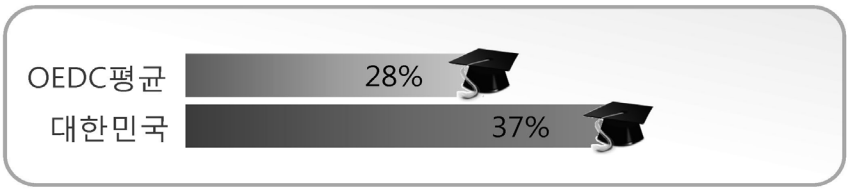


-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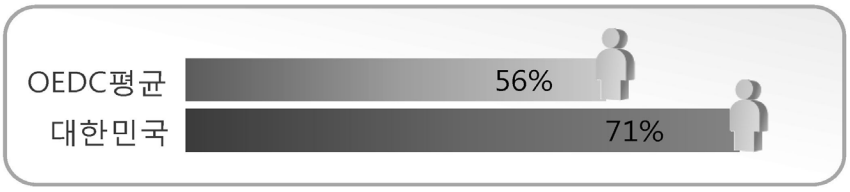
II. 고등교육 경쟁력 국제지표 비교

대학설립 준칙주의 등으로 고등교육규모 양적 팽창

고등교육 이수율(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중 고등교육 이수 인구 수)



대학진학률(대학교 및 대학원 석사과정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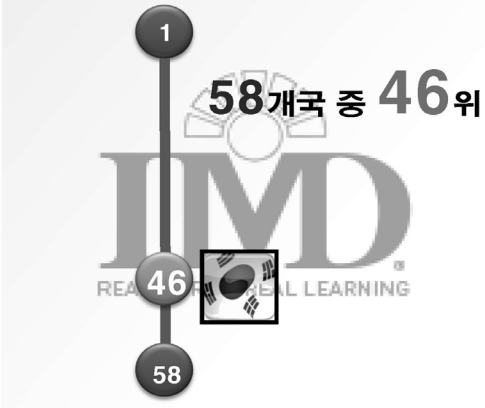


* 2010년 OECD 교육통계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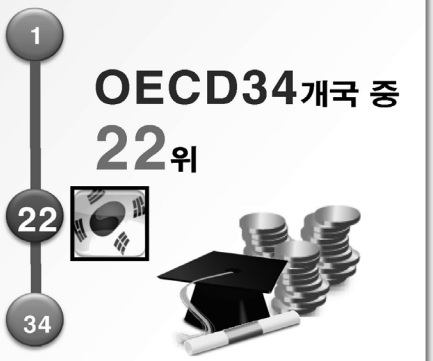
- 3 -

II. 고등교육 경쟁력 국제지표 비교

2010년 IMD평가 대학교육 경쟁력



고등교육기관 학생 1인당 교육비



고등교육 민간지출 비중 79.3% (OECD평균 30.9%)

- 4 -

II. 고등교육 경쟁력 국제지표 비교

OECD 통계로 본 고등교육부분에 대한 투자현황

구 분		OECD 평균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 GDP 대비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		1.5	2.4	3.1	1.3	1.5	1.1
- 공공 재원		1.0	0.6(31위)	1.0	0.7	0.5	0.9
- 민간 재원		0.5	1.9(2위)	2.1	0.6	1.0	0.2
◈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공공·민간 투자의 상대적 비중(%)	공공 재원	69.1	20.7(28위)	31.6	35.8	32.5	84.7
	민간 재원	30.9	79.3(2위)	68.4	64.2	67.5	15.3
◈ 학생 1인당 고등교육기관 교육비 (US $, ppp환산액)		13,717	9,081(22위)	27,010	15,463	14,201	13,823
◈ 고등교육 평균재학 기간동안 학생 1인당 교육기관누적 교육비(US $, ppp환산액)		57,775	31,149(19위)	-	67,153	59,500	61,8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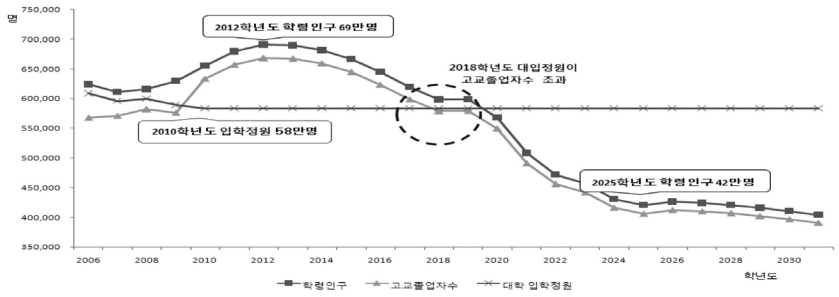
* 자료출처 : OECD(2011),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 5 -

III. 학령인구 수급현황 및 문제점

2012년 69만명에서 2030년 38만명으로 학령인구 급감

- 2010년의 58만명 대입정원 유지 시 2018년 고교 졸업자 수 초과



대학생 수도권 편중으로 지역 불균형 초래와 지방 공동화 우려

- 대규모 대학 수도권 집중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재대학 퇴출로 국가 균형발전 저해

- 6 -

III. 학령인구 수급현황 및 문제점

학령인구 감소로 일부 대학 신입생 미 충원 위기 직면

- 대학재정 악화 및 학사운영 부실로 고등교육 질 저하 우려

지역 우수인재 수도권 대학 진학으로 인재 유출

- 지방대학 교육·연구 역량 약화 및 지역발전 동력 상실

2023년 입학정원 1,600명 규모 약 100개 대학 퇴출 위기

- 지역산업과 연계한 강점분야 중심 구조개혁 필요

- 7 -

IV. 고등교육의 위기와 기회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 높은 교육열 및 고등교육 기대 수준 ■ 세계 수준의 IT 인프라 보유 ■ 고학력 우수 인적 자원 확보	■ 획일화 된 교육 - 능력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 부재 ■ 고등 교육비의 높은 민간지출 의존 ■ 창의력 확장을 위한 교육환경 열악
기 회 [Opportunity]	**위 협 [Threat]**
■ IT 인프라활용 정보화 교육여건 성숙 ■ 세계화와 고도 지식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기회 확대 ■ 해외 대학 및 연구소 협력 강화 ■ 지자체・기업 등과 산학협력 활성화	■ 공급자 주도의 대학운영 - 산업수요와 인재육성의 불일치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계층 및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 이공계 진학 기피 및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

- 8 -

V. 대학의 대응 및 발전방안(위기를 기회로)

기본방향

목 표 — 퇴출 최소화로 상생적 구조조정 실행 및 권역별 대학의 기능적 체제 구축

방 법 — 입학정원 줄이기와 입학자원 늘리기

방 향
- 구조개혁을 통한 정원감축 및 지역산업 연계, 강점분야 중심 특성화
-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국가책임 확대) 및 수도권과 지방 균형발전

원 칙 — 교육적 가치 준수

- 9 -

V. 대학의 대응 및 발전방안

구조조정전략

- 10 -

V. 대학의 대응 및 발전방안

구조조정전략

교육적 가치 준수

목표에서 수단까지 전 과정에서 교육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구조조정 추진

고등교육의 역할 정립

국립.사립.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 필요

퇴출의 최소화

- ✓ 대학은 지방에서 유일한 엘리트 수용처, 고급인력 회귀처, 지역사회 리더들의 터전
- ✓ 지역에서 대학의 가치 매우 크므로 지방대학 퇴출정책은 신중 검토

- 11 -

V. 대학의 대응 및 발전방안

구조조정전략

기능적 체계정립

구조조정의 방향을 예정
권역별로 효율적·기능적 지방대학 발전체계 구축

- ✓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 등을 반영하여 학생 정원 조정
- ✓ 국립·사립·전문대학 등 권역별로 시스템화하는 구조조정(안) 마련

대학 특성화

구조개혁을 통한 정원감축 및
지역산업 연계 대학 강점분야 중심 특성화 추진

- ✓ 대학 통합, 유사학과 통폐합 등 학사조직 선진화 및 특성화 분야 자원 집중
- ✓ 대학과 지역 간의 파트너십에 기반한 특성화 모델 지향
- ✓ 지역협력이 주요 목표로 부상함에 따라 특성화가 구조조정의 핵심 과제

- 12 -

V. 대학의 대응 및 발전방안

구조조정전략

공공성 강화

사립대학 비중을 조정하여 국가의 책무성 강화

- ✓ 사립대의 (준)국립화, 국립대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공공영역을 확대
- ✓ 국립사립대의 동반관계 정립
- ✓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OECD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안정적 재정확보 필요(GDP 1%)

대규모 대학 조정

지역 균형발전과 대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비대해진 대규모 대학 중심의 정원감축

- 13 -

V. 대학의 대응 및 발전방안

구조조정전략

지역 균형발전

지방대학 육성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 ✓ 수도권과 지방 대학간 기능 조정을 통해 교육.연구 여건 격차 완화
  - • 수도권은 사립대학 중심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중심대학으로 특화
  - • 지방은 국립대학 육성, 사립대학은 교육중심으로 특화하되 1~2개 강점분야로 특성화 추진
- ✓ 국립대학은 TWO-TRACK 발전전략 추진
  - • 9개 거점 국립대학은 연구중심대학으로 특화
  - • 지역중심 국립대학은 교육중심 • 지역산업 연계 특화

*** 지역중심 국립대학간 연합 또는 권역별 통합을 통한 거점화 검토**

- 14 -

V. 대학의 대응 및 발전방안

구조조정전략 – 입학정원 줄이기

1안 - 자율형

❖ 시장논리에 맡기되 정부는 최소한의 감독 역할만 담당
❖ 절대기준(대학기관평가 등) 제시, 불법·비리 등 감사를 통해 퇴출 및 구조조정 유도

(장점) 자율적 조정, 대학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
(단점) 진행과정 혼란 예상, 국가책임 방기라는 비난 감수

- 15 -

V. 대학의 대응 및 발전방안

구조조정전략 – 입학정원 줄이기

2안 - 절충형

❖ 지역별·권역별 이상적 소요정원 및 대학 구조조정안을 제시
❖ 정부·지자체 등 공동연구를 통해 권역별 대학기능 및 정원 등 연구
❖ 권역별 대학들의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 방안 논의
❖ 이행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장점) 구조조정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
(단점) 관련 기관들의 합의 도출 및 이행의 어려움 예상

- 16 -

V. 대학의 대응 및 발전방안

구조조정전략 – 입학정원 줄이기

3안 - 정부개입형

❖ 전국 차원의 구조조정 목표를 정하고 하위 일정비율 강제 퇴출
❖ 상대평가 도입과 입학 자원에 맞춘 강제조정

(장점) 입학자원 대비 정원을 필요한 만큼 탄력적으로 조정
(단점) 반발 예상, 합리적 퇴출기준을 정하기 어려우며 지역특성 반영 곤란

*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된 제1안이 바람직하나
제2안과 제3안의 장점도 수용하는 방안 모색 검토

- 17 -

V. 대학의 대응 및 발전방안

구조조정전략 – 입학자원 늘리기

❖ 해외 유학생 유치 확대 등 입학자원 다양화 및 질 관리 병행 추진
❖ 교육 한류의 수출 등 해외 진출을 통한 신규 수요 창출
❖ 다문화 사회 대응 및 평생교육 학습 시스템 구축
▪ 다문화·고령화 사회 교육수요를 반영 학습-고용-복지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입학자원 확대
- 지역 사회 성인학습자의 재교육에 의한 고용증진 및 복지 개선으로 이어지는 학습-노동-복지 통합체제 구축

❖ 지역사회 인적자원의 눈높이 맞춤형 교육지원
▪ 고등교육 형평성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양극화 해소
- 취약계층의 실질적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맞춤형 교육지원 체제 구축
- 선 취업 및 후 진학 인력수요를 창출

- 18 -

Ⅵ. 기타 정책 제언

사립대 출구전략

❖ 대학 퇴출 시 육영사업의 사회적 사명을 다한 설립자가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기회부여

- 퇴출대학 설립자의 잔여재산 일부 회수 등을 허용
- 육영사업을 원하는 사업가의 유입 촉진 방안 마련
  - 학교 인수·경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국가의 재정 부담 완화 및 사립대학 재정구조 강화
- 퇴출 대학의 교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 대책 필요

구조조정 법제화

❖ 구조조정 및 지원에 대한 사항들의 법제화 방안 논의 필요

- 정부는 구조조정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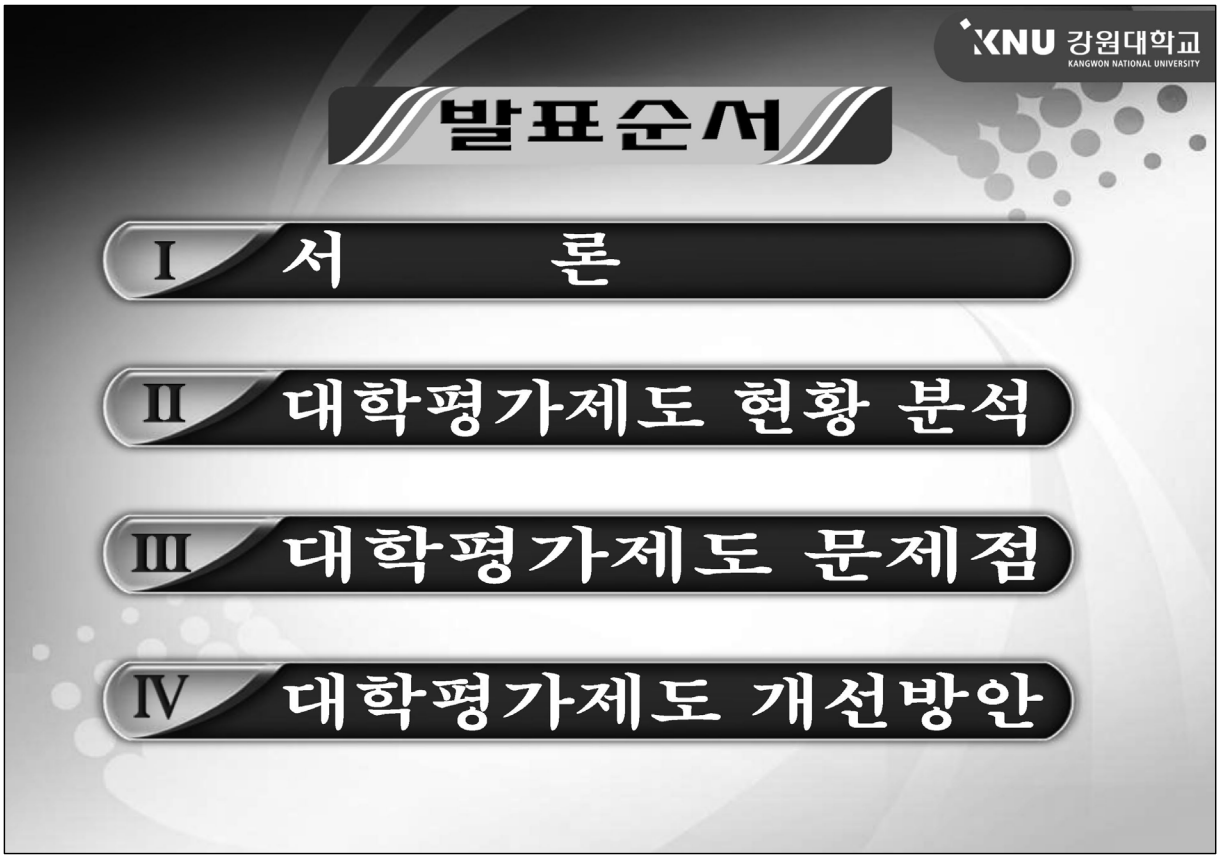
- 19 -

감 사 합 니 다

대학평가체제 개선

신 승 호 총장(강원대학교)

자긍심 넘치는 열린대학
르네상스 KNU
2016
대학평가체제 개선
2013. 6. 28.(금)
KNU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신 승 호(강원대 총장)


KNU 강원대학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발표순서
Ⅰ 서 론
Ⅱ 대학평가제도 현황 분석
Ⅲ 대학평가제도 문제점
Ⅳ 대학평가제도 개선방안

1 도입 배경

- **대학평가가 대학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
  - 대학간 치열한 경쟁구도, 대학의 이미지와 발전에 절대적 영향
  - 대학들은 장기적인 체질개선 보다, 단기적 평가지표 순위 올리기 급급
  - 표피적인 지표 상승과 대학간의 양극화 심화

→ **평가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하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양면성이 있음**

1/25

2 평가의 중요성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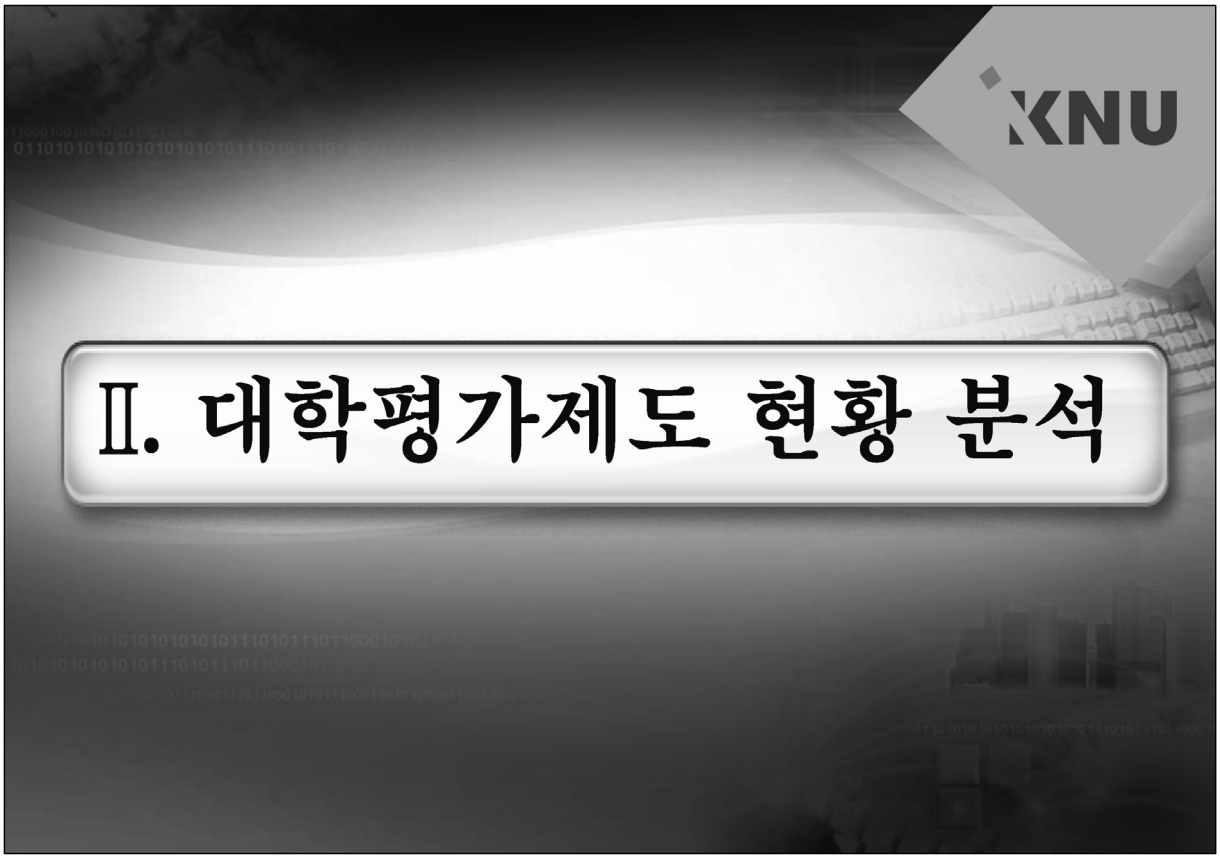
- **발전에 있어 경쟁과 평가는 필수적 요소**
  → 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

- **개인, 부서, 기관, 국가 등 모두가 평가의 대상**

- **평가결과는 폭넓게 활용됨**
  – 개인 연봉, 조직 존폐 등에 영향
  – 개인, 조직의 발전 방향을 제시

→ **평가결과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공정하고 신중한 평가는 매우 중요함**

2/25



1 대학평가제도 현황

대학평가 프로그램의 종류 (한국대학평가원 자료)

① 대학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인증

② 정부재정배분사업 평가

③ 정부재정지원대학 평가

④ 언론사 대학평가

⑤ 자체진단 및 컨설팅 평가

3/25

1 대학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인증

평가유형	평가명 (평가주관)	평가시기 (빈도)	평가준거 수			재정 지원 여부	평가 의무	평가결과 (활용)
			영역	부문	준거			
기관평가인증	대학기관평가인증 (대교협 부설한국대학평가원)	1월~8월 4월~12월 (2회)	6	17	54	△	x	인증자격 부여, 정부 행·재정지원에 활용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전대협 부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7월~12월 (1회)	9	27	72	△	x	
프로그램 평가인증	의학교육평가인증 외 8개 프로그램	2월~12월	프로그램별 평가준거			x	x	응시자격 부여 등

※ △ 표시는 해당 평가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행.재정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신청자격으로 활용되는 경우임

- **평가특징**
  - 대학교육의 품질보증과 개선
- **기관 평가 인증** (2011년 실시)
  - 대학기관 평가인증,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
  - 대교협, 전대협 주관 실시
- **프로그램 평가인증**
  - 의학교육평가인증, 공학교육평가인증 등 8개 분야
  - 해당분야별 평가기관에서 실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등)

4/25

② 정부재정배분사업 평가

평가유형		평가명 (평가주관)	평가시기 (빈도)	평가준거 수			재정 지원 여부	평가 의무	평가결과 (활용)
				영역	부문	준거			
재정 배분	교육역량강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CUE)	3월~4월 (1회)	-	-	8	○	x	재정배분
	ACE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CUE)	3월~4월 (1회)	2	6	31	○	x	재정배분
	WCU·BK21	한국연구재단 (NRF)	4월~7월 (1회)	4	12	28	○	X	재정배분
	LINC	한국연구재단 (NRF)	1월~3월 (1회)	-	-	9	○	X	재정배분

- **평가 특징**
  - 대학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관련 평가
- **교육의 질 제고**
  - 교육역량강화사업
  -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사업 (ACE 사업)
- **연구역량 강화**
  - BK21플러스(WCU 및 BK21 후속사업)
- **산학협력 활성화**
  -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LINC 사업)

5/25

③ 정부재정지원대학 평가

평가유형		평가명 (평가주관)	평가시기 (빈도)	평가준거 수			재정 지원 여부	평가 의무	평가결과 (활용)
				영역	부문	준거			
재정 지원	재정지원 제한대학	교육부	6월~8월 (1회)	-	-	8	○	○	재정지원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교육부	6월~8월 (1회)	-	-	4	○	○	재정지원

- **평가 특징**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한 평가
    ➔ 대학의 생존과 직결
- **평가 종류**
  - 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
  - 학자금대출제한대학평가
- **결과 활용**
  - 분야별 하위 15%를 부실대학 혹은 구조조정중점대학으로 발표하여 자체 구조조정 유도
  - 국가/자자체의 각종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학생정원 증원 배제, 학자금 대출 제한

6/25

④ 언론사 대학평가

평가유형		평가명 (평가주관)	평가시기 (빈도)	평가준거 수			재정 지원 여부	평가 의무	평가결과 (활용)
				영역	부문	준거			
언론사 평가	중앙일보 대학평가	중앙일보 교육개발연구소	6~9월 (1회)	4	-	30	x	x	수요자 정보제공, 컨설팅 제공
	조선일보 아시아 대학평가	조선일보/QS	5월발표 (1회)	-	-	9	x	x	수요자 정보제공
	경향신문 대학지속가능 지수평가	ERISS	12월발표 (1회)	2	6	34	x	x	수요자 정보제공
	동아일보 청년드림대학평가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	5월발표 (1회)	1차:5 2차:5	2차:13	1차:10 2차:52	x	x	수요자 정보제공

- **평가 특징**
  - 순위가 신문지면 및 뉴스에 발표되어 대학의 대내외적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침
  -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에 초점을 맞춘 평가
  - 신입생의 학교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대학들이 평가결과에 매우 민감
- **언론사 평가 실시시기**
  - 중앙일보 대학평가(1994~)
  - 조선일보-QS 아시아 대학 평가(2009~)
  - 경향신문 대학평가(2009~)
  - 동아일보 대학평가(2013)

7/25

⑤ 자체진단 및 컨설팅 평가

평가유형	평가명 (평가주관)	평가시기 (빈도)	평가준거 수			재정 지원 여부	평가 의무	평가결과 (활용)
			영역	부문	준거			
대학자체평가	대학	2년마다 실시	자율			X	○	내부 질 보증, 수요자 정보 제공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KCUE)	6월~5월 (1회)	-			X	x	교육과정 개선 등

- **평가 특징**
  - 학생, 학부모, 산업계 등 수요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자율 평가
- **대학자체평가**
  - 매 2년마다 실시
  - 대학내부의 질을 보증함과 동시에 학생 및 학부모 등 수요자에게 정보제공
-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컨설팅 평가)
  - 분야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핵심 직무역량, 교과목 등 평가
  - 대학 교육과정 개선이나 학생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

8/25

2 대학평가제도 현황 분석

대학평가제도 현황 분석

① 순위평가 측면의 현황 분석

② 인증평가 측면의 현황 분석

③ 효과 측면의 현황 분석

9/25

① 순위평가 측면의 현황 분석

- **구조개혁을 위한 정부주도 평가**
  - 정부재정배분사업평가, 정부재정지원대학평가
  -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 국민의 행복 추구 등 큰 개념을 염두에 두고 고등교육의 방향 제시
  - 당근과 채찍이 가미된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평가
    ➔ 부실대학 지정 등으로 대학 존폐를 가늠하는 척도

- **순위평가 결과의 행·재정 지원/제약 활용**
  - 행·재정 지원 : 교육역량강화사업, LINC 사업
  - 행·재정 제약 : 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 학자금대출제한대학평가
  - 대학정보공시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 **공시자료가 해당 평가의 목적과 성과지표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한 분석과 보완이 필요**

10/25

① 순위평가 측면의 현황 분석

- **수요자 중심의 언론사 평가**
  - 소비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 측면에서 평가 실시
  - "언론"의 특성 상 언론사 평가는 일반 국민에게 영향이 크며, 서열화 조장 가능성이 큼

- **언론사 및 대학자체 평가의 활용**
  - 학생 및 학부모는 대학 장단점 파악가능, 기업은 대학 구인 정보수집
  - 대학들은 학교의 이미지 제고, 우수 신입생 유치 등을 위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② 인증평가 측면의 현황 분석

- **대학 및 전공 프로그램 인증 평가**
  - 각종 프로그램 평가인증, 산업계 관점 대학 평가
  - 양질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 ➔ 특성화, 전문화 중점
  - 배출되는 전문인력의 질을 보장
  - 프로그램 인증 평가의 경우, 해당분야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라는 측면에서 많이 활용

- **교육과정 개선, 연구 및 산학 프로그램 강화에 활용**
  - 대학 및 프로그램 인증은 교육과정의 내실화, 연구수준의 국제화, 산학협력 활성화 등에 활용
  - 인증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대학은 주기적으로 교육과정을 개편, 연구 및 산학 프로그램을 신설 하거나 개선

    ➔ **평가의 순수한 목적에 부합하는 순기능**

③ 효과 측면의 현황 분석

- **교육의 질 향상 효과**
  - 교육역량강화사업, ACE 사업 → 학부 교육의 질 향상
  - BK21 플러스 → 대학원 연구 및 교육의 질 향상
  - LINC 사업 → 산학협력 활성화
  - 프로그램 인증 → 해당분야의 교육과정 내실화

- **대학 시스템 개선 효과**
  -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대학들의 구조조정 혹은 대학의 내부구조개혁은 필수적인 요소
  - 프로그램 평가인증, 교육역량강화사업, LINC 사업

  ➔ **대학의 전통적인 조직이나 오래된 프로세스를 보다 선진적인 조직이나 트렌디한 프로세스로의 변화 요구**

  - 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 학자금대출제한대학평가

  ➔ **구조조정 활성화 효과**

13/25

KNU

Ⅲ. 대학평가제도 문제점

1 단기적 평가, 소수 지표중심 평가의 한계성

- 1년 단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의 행·재정사업에 적용
- 소수의 계량화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함
- 이를 행·재정 지원의 잣대로 삼고, 더 나아가 부실대학으로 낙인
  - ➔ 단기적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며, 장기적 개혁이 어려움
  - ➔ 소수의 지표에 몰입되어 대학의 다양성이 훼손 가능성

❖1년 이상의 기간을 누적 평가하고, 장기적인 측면의 지원책으로 결과가 활용되도록 보완

14/25

2 종합평가의 한계와 대학 줄 세우기

- "종합 몇 위", "무슨 대학 몇 단계 상승" 등으로 대중을 자극하고, 종합 1등, 2등으로 오랜 기간 줄 세우기
  - 우리나라의 최상위권 대학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수
  - MIT나 Stanford 가 공학분야에서 세계최고 일 수는 있으나 타 분야는?
  - 더 세부적으로 전기전자는 MIT, 컴퓨터는 Stanford 가 우수하다는 특화된 평가
- 대학이 차별화된 특성을 나타낼 기회를 원천 봉쇄함
- 지방대학들이 지역과 연계한 고유한 기능을 갖는 것을 방해

❖ 평가는 세부 전문분야로 나누어 다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역할과 기능별로 대학을 우선 분류한 다음 동일 그룹내에서 평가

15/25

Ⅰ. 서 론 | Ⅱ. 평가제도 현황 분석 | **Ⅲ. 문제점** | Ⅳ. 개선방안

3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 **평가의 핵심은 평가자, 피 평가자, 수요자 모두 공감하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이나, 현재 평가는 이에 미흡함**
- **평가지표 중 취업률이 지나치게 강조됨**
  - 취업률 평가에 의해 예술계열, 사범계열 학과들이 홍역을 치름
  - **→ 이들 학과는 취업률이 객관적인 지표로 보기 어려움**
- **국제화 지표도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대학은 국제화 요구가 다른데, 동일한 잣대를 대는 것은 공정성 결여**
- **지나친 계량화로 유연성 부족 (99%가 100% 보다 얼마나 부족한가?)**

❖ **다양한 정성적 지표 개발**

❖ **다수의 전문인력들이 장기적인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16/25

Ⅰ. 서 론 | Ⅱ. 평가제도 현황 분석 | **Ⅲ. 문제점** | Ⅳ. 개선방안

4 평가지표의 일관성 부재와 경직성

- **평가제도에 내에서도 상충되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많음

대표적 사례 (대형강의비율)	➢ 교육능력강화사업 등에서는 대형강의가 많을수록 점수가 낮음 ➢ 이의 개선을 위해, 시간강사를 채용해 대형강의를 소형강의로 바꾸어 교육의 질을 개선하면,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아짐
상충된 지표 사례	➢ 어떤 평가에서는 대형강의 혹은 이러닝 강의 등을 권장함 ➢ 또 다른 평가에서는 소형강의를 권장함
지표 경직성 부작용	➢ 100% 향한 충원율의 소수점 아래 한 두 자리 경쟁 ➢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학생들과 취업률을 높여야 하는 대학 사이의 상충된 이해(6.1일자 기준)

❖ **피평가자 및 수요자 요구가 반영된 장기적 관점의 평가지표 개발 필요**

17/25

5 순위 위주의 언론사 평가

- 평가지표의 객관성 및 신뢰성, 평가방법의 공정성과 무관하게 평가순위가 대학의 절대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결과 초래
- 대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양적인 평가에 치중
- 평가기준, 지표 등에 있어서 대학과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 대학의 서열화에만 관심, 객관적 검증은 없음

❖ 평가의 선정성, 대학의 서열화를 지양하고, 객관성 증대 노력 필요

18/25

6 대학평가와 재정지원 연계 부작용

- 대학평가와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함으로써 대학의 모든 정책을 평가에 맞추도록 유도
- 대학의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어렵고 평가지표 관리를 위해 자원과 인력을 집중
- 근본적 개혁이 어렵고 대학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소홀
- 대학 경영의 불안정성 증대

❖ 대학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중심의 평가

❖ 기본적인 지원과 평가에 의한 차등지원의 구분

19/25

Ⅰ. 서 론 | Ⅱ. 평가제도 현황 분석 | Ⅲ. 문제점 | Ⅳ. 개선방안

1 인증평가와 순위평가의 구분이 필요함

- ❖ 인증평가과 순위평가는 목적 자체가 다르므로,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또한 차별화되어야 함
- ❖ 인증평가: 업무 혹은 프로그램 수행 능력 및 과정을 평가
  → 업무능력 향상, 조직 구조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 개선 등에 활용
  → 기본 여건 인증에서 '명품인증' 등 국제수준의 인증 필요
- ❖ 순위평가: 객관적 지표를 기반으로 대학의 질을 평가
  → 수요자 정보제공, 행재정 지원 및 제약 등에 활용

2 평가는 대학의 발전적 미래를 제시해야 함

- ❖ 평가결과를 행·재정 지원이나 제약에 활용하는데 그치지 말고, 대학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컨설팅 결과로 활용되어야 함
- ❖ 평가의 목적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어야 함

20/25

3 평가지표 및 점수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함

- ❖ 정성평가 가미: 객관성 담보를 위한 정량평가 못지 않게, 개별대학 특성을 감안한 정성평가가 요구됨
- ❖ 평가지표 경직성 탈피: 99.9% 충족, 0.1% 미충족인 경우에 불합격 혹은 꼴찌 전락은 경직된 평가로, 이를 탈피하는 합리적 대안 제시가 필요함

4 장기적 관점의 평가제도 정착이 요구됨

- ❖ 단기적, 특히, 1년 단위의 평가를 지양하고, 다년간 누적평가, 중장기 평가를 실시함
  → 대학이 거시적 관점에서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도록 유도함
- ❖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메타 평가(평가에 대한 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진화적인 평가제도 개선 시스템을 구축함

5 단기적 성과 보다 장기적 향상도에 초점을 맞춤

- ❖ 취업률, 충원율 등 단기적 성과보다는 학사관리, 시스템 개선 등 미래지향적 평가요소를 고려
  → 대학 경쟁력 강화, 취업의 질 개선 등에 영향을 미침
- ❖ 결과 중심 평가를 지양하고, 투자 대비 효과를 평가하는 투입 대비 산출 평가로 전환을 모색함

6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줄 세우기" 평가를 추구함

- ❖ 종합순위 중심의 "한 줄 세우기 평가"를 지양하고, 대학이 각자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분야별 평가를 수행함
  → 평가는 세부 전문분야로 나누어 다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 획일적인 기준 하에서의 평가를 지양하고, 역할과 기능별로 대학을 우선 분류한 후, 동일 그룹 내에서 평가함

7 현장을 고려한 평가지표 적용이 필요함

❖ 취업률 기준프리랜서, 1인 창업 등), 평가 시기(6월, 12월 등) 등이 대학 및 사회의 실제 현장을 잘 반영하는지 분석이 요구됨

❖ 충원율 100%가 바람직한가? 입학정원의 유연성이 바람직한가?
→ 많은 학생 대상의 교육이 더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함

❖ 정부(5년), 총장(4년) 등 짧은 주기의 중첩에 혼돈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평가제도 마련

23/25

8 평가기능의 통합 및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됨

❖ 많은 평가 기관, 상이한 평가 기준, 상충된 평가 지표에 의해, 대학들이 장기적 개혁보다는 단기적인 임시 해결책에 집중함

- 평가주체에 따라 상이한 평가지표 설정 및 상이한 비중 배정 문제
  예) 정부재정지원사업 : 정부정책 반영지표 중시
  언론사 평가 : 평판도 비중 중시
- 대학의 설립,목적,설립주체, 규모, 소재지에 따라서 특정지표에 극명한 차이가 있음
  → 다양한 대학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평가 필요
- 상대평가에 의한 순위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서 순위에만 집중하여 교육자체보다는 지표에 집착

24/25

9 독립된 전문적 대학평가 기관 필요

❖ 대학평가 창구의 일원화 및 전문화로 자율적 대학의 질 관리 필요

❖ 미래지향적 평가지표 개발로 개별대학의 발전 방향 제시

❖ 설립 및 운영 주체

1안) 대교협, 전대협의 부설 산하기관

2안) 비영리 독립법인

3안) 공공기관 특수법인

25/25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투자

김 준 영 총장(성균관대학교)

고등교육재정 진단과 대책[1)]

성균관대학교 총장 김 준 영

Ⅰ. 성찰 및 패러다임 전환

1. 성찰적 측면

□ **고등교육재정 정책기조**

○ 자율성 보장 보다 공공성 강화 내지는 책무성 확보로 회귀

-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으로 2011년부터 등록금인상률 상한제도 도입
- 교비회계 중 등록금회계로부터 적립되는 해당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보수 목적으로만 적립하도록 제한

  → 미래 건축비용 충당에는 턱없이 부족한 비현실적인 적립금 제한 조치로 대학들은 인식
- 대학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에 등록금 인하·동결 관련 지표를 반영하여 등록금 인하·동결 압박
- 평가지표에 의존된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이 미래 지향적인 고등교육발전과 대학특성화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 대학들은 회의적 시각과 비판적 인식
-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신규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부족을 제외하고는 기성회회계에서 추경, 또는 전용 등을 통한 인건비 인상이나 지급항목 신설 금지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사립대학 등록금 면제 및 감액비율을 '현원의 10%'에서 '등록금 총액의 10%'로 강화

1) 그동안 대교협과 관련학회에 발표되었던 대학재정 관련 논문과 연구보고서의 통계자료와 정책대안을 주로 참고하였으며, 자세한 참고문헌은 맨 뒤에 첨부하였음.

-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대학 예·결산심의는 과도한 규제로 대학들 인식
-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칸막이가 교육부, 대학, 학생 간 불협화음 야기

□ 고등교육재정 구조적 취약성

○ 정부 고등교육재정 총량규모의 부족

○ 고등교육재정 중 GDP 대비 정부부담(0.7%)은 OECD 국가 평균(1.1%) 보다 낮고, 민간부담(1.9%)은 OECD 국가 평균(0.5%) 보다 4배 가까이 많음

○ 2013년 고등교육재정은 7조 7천억원, 이중 반값 등록금 재정지원이 3조 1백억원으로 약 40% 차지

※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2013년 고등교육재정 규모는 4조 3,342억원으로 2008년의 3조 7,797억원과 비교할 때, 5년간 5,545억원 증가에 불과

○ 과도한 교육시설비 투자

※ 학생 1인당 성질별 고등교육비 중 자본적 경비 비중(2009년)이 한국은 16.5%인데 비하여 OECD 평균은 9.0%에 불과

○ 보통교육지원 편중현상 확대

※ 1인당 교육예산: 유초중등 / 고등교육 = 3.13배

○ 사립대학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 등록금 의존형 사립대 재정구조
(등록금 의존도 51%, 운영수입 기준 등록금의존도 74.4%, 2010년)

2. 고등교육재정 패러다임 전환: 경쟁 → 협력

□ 연간 예산 따내기 → 고등교육 재정 안정화 기반의 制度化

○ 연간 고등교육예산 확보 규모가 불확실하고 유동적이어서 고등교육재정 지원사업 추진의 불안정 → 지속가능한 고등교육발전 저해

○ 교육 百年大計의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기반의 법제화 필요

□ 교육부 - 대학 간 파트너십 구축

○ 고등교육재정을 둘러싼 교육부와 대학의 불협화음 극복

○ 이해당사자인 대학의 정책참여와 소통을 증진하는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정책수립과정과 추진구조에 대학과의 협치 생태 존중

○ 고등교육재정 운영의 甲乙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관계 정립

Ⅱ. 고등교육재정 진단

1. 정부의 고등교육투자 절대 부족

□ 정부 고등교육재정 총량규모 부족

○ 2009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비율은 0.7%로 OECD 국가 평균 1.1%에 비하여 크게 부족

○ 반면 초·중등교육단계의 경우 정부부담이 3.6%로 OECD 국가평균과 대동소이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부담의 경우 GDP 대비 1.9%로 OECD 국가 평균 0.5% 보다 크게 높은 수준

○ 고등교육재정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전체 대학재정의 20.7% 수준

- 사학의 비중이 비슷한 일본의 32.5%보다 낮은 수준
- OECD 평균 78.1(2007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 OECD 국가들은 평균 21.9%만을 민간이 부담하는 반면,
- 우리나라 대학재정의 경우 77.4%를 민간이 부담

○ 국내 주요대학의 재정규모 열악: 미국대학의 1/10 수준

※ 하버드대: 4조 1,721억원, 예일대 2조 9,223억원, UCLA 4조 2,749억원, 위스컨신대(매디슨) 2조 6,688억원 등

○ 고등교육의 민간의존적 분담구조 하에서 반값 등록금 재정지원은 학생 직접지원액은 확대하고 대학재정 지원액은 축소되는 결과 초래

〈표 1〉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구성

(단위: %)

구 분			전체 교육단계			초 · 중등교육단계			고등교육단계		
발표년도	기준년도	국가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2010	2007	한 국	4.2	2.8	7.0	3.1	0.8	4.0	0.6	1.9	2.4
		OECD평균	4.8	0.9	5.7	3.3	0.3	3.6	1.0	0.5	1.5
2011	2008	한 국	4.7	2.8	7.6	3.4	0.8	4.2	0.6	1.9	2.6
		OECD평균	5.0	0.9	5.9	3.5	0.3	3.7	1.0	0.5	1.5
2012	2009	한 국	4.9	3.1	8.0	3.6	1.1	4.7	0.7	1.9	2.6
		OECD평균	5.4	0.9	6.3	3.7	0.3	4.0	1.1	0.5	1.6

자료 : OECD(발표연도). *Education at a Glance.*

○ 학생 1인당 교육비 절대수준 비교에서 미국 대비 32.6%에 불과하고, OECD 평균과 비교해도 73.4%에 불과

○ 따라서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과 대학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투자 증대가 필수적임

〈표 2〉 OECD 국가의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교육비(2009)

(단위 : US $, PPP)

국가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			총계
			중학교	고등학교	계	전문대학	대학	계	
한국	6,047	6,658	7,536	11,300	9,399	6,313	10,499	9,513	8,542
미국	8,396	11,109	12,247	12,873	12,550	– –		29,201	15,812
OECD 평균	6,670	7,719	8,854	9,755	9,312	– –		12,967	9,252
한국/미국(%)	72.0	59.9	61.5	87.8	74.9	–	–	32.6	54.0
한국/OECD(%)	90.7	86.3	85.1	115.8	100.9	–	–	73.4	92.3

자료 : OECD(2012). *Education at a Glance.*

□ 정부 재정지원주체의 다양성 및 사업의 중복성

○ 각 정부부처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산배분의 주체만 다를 뿐 중복사업인 경우 발생

○ 유사한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행정적 과부하는 물론 비효과적인 사업성과가 나타날 수 있어 정부부처간에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합·조정할 필요성 대두

○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 대학입장에서는 사업별 지원액의 과소로 인해 연구 및 교육과정 혁신 등 일관되고 장기적인 사업추진의 어려움 발생
- 유사한 성격의 사업계획서 반복 작성, 개별적 사업관리 등으로 인한 운영상 비효율 문제 발생
- 사업별로 각기 다른 분야를 응모하여 자원의 집중투자가 필요한 대학 특성화를 저해하는 결과 초래

○ 사업별 재정지원 방식에 있어서도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이 특정용도에만 투입될 수 있는 목적사업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운영상 경직성 초래

2. 고등교육기관의 세입구조 취약

□ 등록금에 의존하는 세입

○ 고등교육기관의 세입결산 현황(2010)을 보면, 등록금 의존도는 국립대23.7%, 사립대 51.1%이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국립 48.5%(입학금·수업료 제외시 45.0%), 사립 12.3%에 불과

〈표 3〉 2010년도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재정수입구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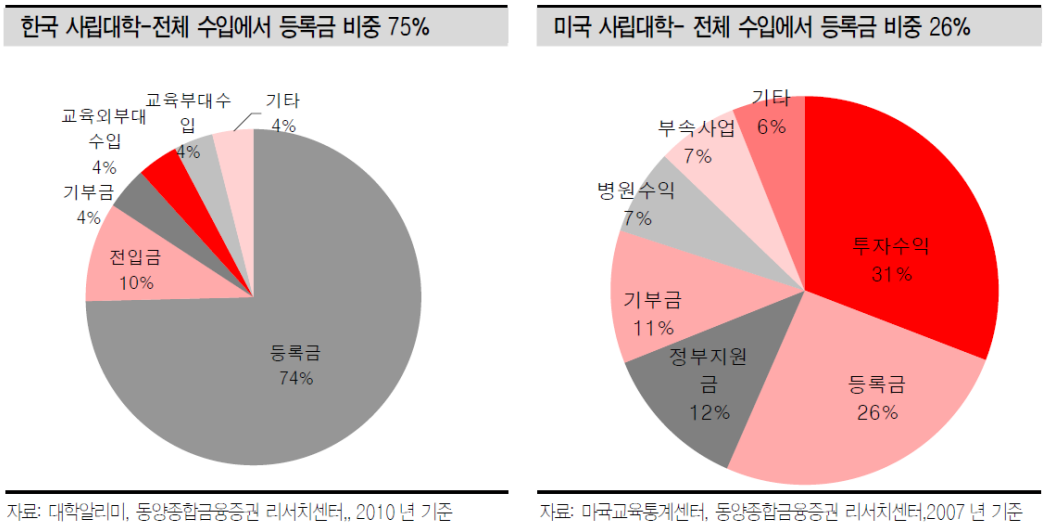
(단위 : 억원)

	구분	국고보조금		기성회비	발전기금	이월금	기타	계
국립	수입액	37,225		15,493	1,430	12,646	9,987	76,781
	비중(%)	48.5		20.2	1.9	16.5	12.9	100
	구분	국고보조금	법인전입금	등록금	기부금	교육부대·외 수입	기타	계
사립	수입액	31,983	14,256	132,708	4,893	21,660	54,194	259,694
	비중(%)	12.3	5.5	51.1	1.9	8.3	20.9	100

○ 사립대학의 전입금 수입은 5.5%이며, 기부금 수입은 국립과 사립 모두 1.9%에 그치고 있고, 사립대학의 경우 운영수입 기준으로 등록금 의존도를 산출하면 74.4%에 달함(2010)

※ 미국 사립대학 운영수입 기준 등록금 비중: 26%(2010)

〈그림 1〉 국내 사립대학과 미국 사립대학의 전체 수입대비 등록금 비중 비교



자료: 김후정(2011). 미국 대학이 등록금에 의지하지 않은 이유. 동양종합금융증권.

○ 등록금 의존형 재정구조인데도 최근 5년간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 크게 못 미치거나 오히려 인하했음

〈표 4〉 최근 5년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증가 추이

(단위 : 천원, %)

구 분		'08	'09	'10	'11	'12
국·공립대	등록금	4,169	4,191	4,292	4,351	4,112
	인상률	8.7	0.5	2.4	0.9	-5.5
사립대	등록금	7,380	7,410	7,531	7,689	7,385
	인상률	6.7	0.5	1.6	2.2	-3.9
물가상승률		4.7	2.8	3.0	4.0	-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회계정보시스템; 통계청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 자료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저조

○ 사립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평균은 2010년 51.9%, 2011년 51.3%, 2012년 51.8% 수준

〈표 5〉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기준 학종별 충족비율(2012)

(단위: 개교)

학종	구분	확보기준 충족 비율						
		100%이상	90%이상	70%이상	50%이상	30%이상	30%미만	계
일반	학교수	34	2	8	18	24	68	154
	비율(%)	22.1	1.3	5.2	11.7	15.6	44.2	100
산업	학교수	0	0	0	0	1	1	2
	비율(%)	0	0	0	0	50.0	50.0	100
대학원	학교수	30	0	1	4	3	2	40
	비율(%)	75.0	0	2.5	10.0	7.5	5.0	100
각종	학교수	1	0	0	1	0	0	2
	비율(%)	50.0	0	0	50.0	0	0	100
총계	학교수	65	2	9	23	28	71	198
	비율(%)	32.8	1.0	4.5	11.6	14.1	35.9	100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2012b). 2012 대학재정분석보고서.

○ 2011년 결산 기준으로 수익사업회계를 운영하는 법인 수는 일반대학 90개, 산업대학 3개, 대학원대학 13 등 106개 법인으로 전체 사립대학의 50% 수준에 그침

Ⅲ. 고등교육재정 확충 및 개선 방안

1. 고등교육재정 GDP 1.1% 확충

○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는 사안임. 단, 확충 방법론상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국면 → 학생 직접지원액(국가장학금 지원예산)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재정 지원 총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재정 확충 필요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둘러싼 합의점 역시 찾기가 어려운 상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협의 결과 6월 임시국회 법안공청회 제외)으로 단계적 접근 필요

- 1단계(안정적 재정확보): 정부 일반회계 예산계정에 「고등교육재정지원」(GDP 1.1%) 항목 설정
- 2단계(법제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또는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

2. 민간부문 학자금 지원 등 참여 확대

○ 대학생 등록금 펀드 조성 → 국가장학금과 연계
- 민간부문 자녀장학금 지원
- 동문회 장학금 지원
- 민간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 기타 민간부문 장학금 지원

※ 민간부문 장학금 지원액 법인소득 감면제 도입 추진

○ 학자금 지원 목적형 소액세액공제 제도 도입 추진
- 세액공제액만큼 국가장학금지원 대체효과
- 상기 제도의 경우 현 정부의 세수확대정책과 상충되는 면이 있으나,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부담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과 병행하여 민간부문 학자금 지원 채널 적극화

○ 산학협력 활성화
- 계약학과 규제완화 → 先취업 後학습 기회 확대 및 학자금 지원 유인 확대
- 인턴십, 현장교육 확대 → 민간부문에서 재교육비 절감 → 인턴, 현장교육 지원비 지원

○ 대학교육시설, 기숙사 등 민자유치 확대
- 민자유치 관련 각종 규제 완화

○ 기부연금제 검토
- 민간의 대학 기부금 지원 확대차원에서 기부연금제(Charitable Gift Annuity) 도입을 통해 대학 기부금 확대 유도
- 미국대학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주립과 사립대학 모두에서 시행

※ 기부연금제도는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법인에 기부하고,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자손에게 기부가액의 일정 부분을 연금과 같이 지급하는 계획기부 제도(2012년 보건복지부 추진사항)

〈표 6〉 미국대학의 기부연금 활용 현황

구 분	기부연금 활용기관의 속성		기부연금 약정자의 평균 기부금액
	응답기관 중 구성비	응답 기관수	
사 립 대 학	23.2%	132	$59,167
국공립대학	12.0%	68	$78,548
병원 / 의료관련	16.4%	93	$58,207
사회서비스	5.3%	30	$32,875
예 술	1.4%	8	$22,915
환 경	1.8%	10	$48,993
종교기관	16.7%	95	$22,879
지역재단	7.9%	45	$55,455
나눔단체 서비스제공 영리기관	1.1%	6	$8,571
기 타	14.3%	81	$37,903
유효 응답 기관수	100.0%	568	$43,371

자료: ACGA 2009 Survey of Charitable Gift Annuities, p. 11-12, 신기철(2012). 기부연금 제도 도입방안. 보건복지부 공청회 자료집에서 재인용

3. 고등교육재정 지원 확대 및 효율화

○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정부, 국회, 대학 삼각 공감대 형성

○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확대 방향

- 근본적으로 고등교육의 '사업비' 보다는 고등교육 '재원'을 증대
- 상대적으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사립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에 명시적 지원규정 마련

(외국사례) 건전사학지원법 → 건전한 사학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Block grant 방식으로 지원

- 정부 교육재정 배분 우선순위를 초중등 보통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전환

※ 전체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예산은 13.9%에 불과, 일본의 경우 24%

- 지방정부의 지역대학 교육·연구활동 지원 확대 → 해당 지역출신 학생들 대상 재정지원 차별화

○ 고등교육재정 지원사업 중 유사, 중복성 사업의 효율성 제고

○ 고등교육재정 지원사업에서 지원비의 포괄재원 운영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주관 대학의 자율성 확대

○ 연구비 중 간접비 지급비율 확대 : 27%(2010) → 33%(2011) → 40%(2013)

4. 고등교육재정 투자의 방향

○ 형평성

- 고등교육재정지원 대상별(기관, 교원, 학생, 국·사립대) 형평성 문제

사립대학

- 한국사립대학의 역사성 및 고등교육과 인력양성의 비중에 비하여 고등교육재정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 → 등록금 의존형 사립대학 재정기반 취약 → 사립대 국제경쟁력 제약 요인
- 사립대학 비중은 80%인 반면 정부지원금 중 사립대학 지원 비중은 40% 미만에 불과
- 일본은 전체 사립대학 재정의 10% 수준 경상비 지원사업 확대

지역대학

- 지역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와 인력양성 비중에 비하여 저출산, 대입학령인구 감소, 입학자원 유출로 인한 지역대 재정기반 위축
- 지역대학 학생수는 62.5%인 반면 정부 지원액은 57.3% 수준

- 고등교육예산 중 연구분야에 비하여 HRD 분야 예산 과소
  → 전체적으로 교육조직 강화 예산은 10%에도 미달
- 사업지원의 이공계 편중에 따른 미래창조사회 기반이 될 인문사회분야 지원 미흡

○ 특성화

- 대학 유형별 특성반영 → 재정지원사업의 대상과 성격 차별화 → 실질적인 대학 특성화 유도
- 대학의 설립취지, 인재상, 비교우위영역, 지역생태에 따라 대학별 자발적 맞춤형 대학발전 지향

※ 향후 GDP 1.1% 수준으로 고등교육재정이 확보될 경우, 확충된 재정을 대학특성화 지원사업에 집중투자(예: 교육특성화 100개, 연구특성화 50개, 지역특성화 50개)

○ 산학협력

- 산학협력 재정지원을 통해 산·관·학·연의 다양한 창의적 융합 연구 및 교육과 연계한 인력양성, 기술개발과 이전 활성화
- 협력주체 간 유기적으로 밀착된 지식생태계 조성

5. 등록금 상한제의 개선

○ 금융 위기가 닥친 2009년 이후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로 실질등록금 약 17% 인하 결과 초래

→ 대학의 자구노력으로서 감내할 수 있는 레드라인을 넘어선 수준 → 대학교육의 질과 대학 경쟁력 저하로 파급될 국면

○ 등록금 상한제(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대한 대학 자율성 차원에서 전향적인 검토와 함께

○ 현 등록금 상한제 하에서라도 법 조항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규제 제거 필요

6.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 강조

○ 투명한 재정운영시스템 보강과 함께 대학 내 재정효율화 노력 병행

→ 엄격한 대학재정 회계기준 정착

○ 기존 적립금의 대학경쟁력 확보분야 투자 및 과도한 적립금 자제

○ 국립대학 등록금 및 기성회비 등을 통합한 통합재정 회계운영 및 보고 일원화 확대

7. 고등교육재정 협의체 구성

○ 고등교육재정이 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고등교육재정 협의체 발족 필요

○ 정부, 국회, 대학이 참여하여 균형점을 도출하는 협의체로서 역할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10).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안). 2010.11.

교육부(2013a).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2013년 국정과제 실천 계획. 2013 대통령 업무보고. 2013.3.28.

교육부(2013b). 2013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국회예산정책처(2013). 2013년 수정 경제전망.

기획재정부·관계부처합동(201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

김병주(2013). 새정부의 대학재정 확충방안과 과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3 동계세미나 대학재정대책위원회 자료집.

김병주(2012).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재정확충 방안.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 재정확충 및 투명화방안 토론회 자료집. 한국사학진흥재단, 11-62.

반상진(2012). 국립대학 회계통합의 방향과 과제. 제37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제도 개선방안(22012.4.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새누리당(2012).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18대 대통령선거 공약집.

송기창(2013). 대학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와 교육행정의 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3.5.11.

송기창, 한유경, 김병주, 고장완, 남수경, 오범호(2012). 사립대학재정의 현안 및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송기창, 김병주, 백정하(2008). 대학재정확충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송기창, 반상진(2012). 고등교육재원 GDP 대비 1.1% 확보 및 활용 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정미(2012).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운영의 이슈와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포지션페이퍼, 제9권 제7호. 현안보고 OR 2012-05-7.

임후남, 권기석, 엄준용, 이정미(2012).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한국교육개발원(2012). 고등교육재정지원 정보시스템 2011년 사업 결과보고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2011). 2011 대학재정분석보고서.

한국사학진흥재단(2012a). 2012 대학재정통계연보.

한국사학진흥재단(2012b). 2012 대학재정분석보고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현안 브리핑

이 원 근 사무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현안 브리핑

일시: 2013. 6. 27(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목차

I • 강사제도

II • 수업목적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1. 강사제도

목차

I • 강사제도 법적 경위

II • 대교협의 대응 경과

III • 대교협의 회원대학 의견수렴 결과

IV • 대교협의 대안

V • 대교협의 향후 대응 계획

I 강사제도 법적 경위

○ 정부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소위 강사법) 발의 (2011. 3. 22)
○ 국회 통과 및 시행(2011. 12. 30)
○ 강사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제정 공청회 (2012. 8. 8)
○ 민주당 유기홍 의원 외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발의 (2012. 10. 31)
- 고등교육법의 취지와 달리 강사의 처우개선은 없고 대규모의 시간강사 해고 사태가 예상되며 대학 행정당국의 행·재정상 준비 미흡으로 법 시행 3년 유예
○ 법 시행 1년 유예로 새누리당과 합의 및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수정안 국회 통과 (2012. 11. 21)
○ 현재 유기홍 · 김상희 · 정진후 의원 대체법안 준비 중

II 대교협의 대응 경과

2012.11.12	• 「강사제도 유보 건의문」 청와대·국회·교과부 발송
2013.2.15, 2013.3.28	• 유기홍·김상희·정진후 의원실 간담회 참석
2013.5.1	• 서거석 회장, 이원근 사무총장 국회 방문
2013.5.6	• 서거석 회장, 이원근 사무총장 청와대 ·교육부 방문
2012.8-2013.6	• 회원대학 총장, 교무처장, 강사 대상(1차-4차) 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 시행

III 대교협의 회원대학 의견수렴 결과

○ 1차 회원대학 총장 대상 강사제도 시행시 우려되는 문제점 의견 수렴

- 응답대학 수: 회원대학 202개 중 27개 대학 응답
- 조사기간: 2012.8.12 ~ 2012.8.17

- 결과

- 기존의 시간강사들을 교원의 범주에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교원(교수) 위계의 혼란 초래
- 강사 1년 임용은 1학기 교과목(과목 중심)을 1년 교과목(강사 중심)으로 개설하게 됨으로써 대학 수업의 다양성과 학생선택권 저해 및 '교육의 질' 저하 우려
- 채용 및 재계약 관련 소청심사 가능성에 대한 대학의 행정적 부담 가중
- 제도 도입에 따른 사립대학 강사 '인건비'에 대한 재정적 부담

III 대교협의 회원대학 의견수렴 결과

○ 2차 회원대학 총장 및 교무처장 대상 강사제도 시행찬반에 대한 설문조사

- 응답대학 수: 회원대학 202개 중 141개 대학 응답
- 조사기간: 2012.11.6 ~ 2012.11.12

- 결과

- 68%의 대학이 '강사제도 폐지'를, 16%의 대학이 '강사제도 유보'를 선택
- 66%의 대학이 강사임용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 '전액 정부지원'을, 34%의 대학이 '일부 정부지원'을 선택

2. 수업목적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목차

I • 수업목적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전체 경위

II • 대교협의 수업목적저작물제도 관련 현안 대응 경과

III • 설문조사 결과

IV • 대교협의 대안

V • 대교협의 향후 대응 계획

Ⅰ 수업목적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전체 경위

○ 문광부장관,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징수단체로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지정(2008.3)
○ 저작권법 제25조에 근거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2011.4)
: 학생 1인당 연간 기준 금액 4,120원
○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각 대학에 보상금 지급약정 체결 요구
○ 문광부 장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고시(2012.4)
: 학생 1인당 연간 기준 금액 3,132원
○ 대학의 보상금지급계약 미체결에 대한 한국복사전송권협회의 보상금 청구소송 제기(2012.7)로 계약 체결 보류 중
– 경북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명지전문대, 서울디지털대

Ⅰ 수업목적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전체 경위

○ 18대 국회 서상기 의원 대표 발의 : "저작권법 제25조" 개정 발의 (2011.12.30) (국회 만료로 자동폐기)
○ 19대 국회 서상기 의원 대표 재발의 : "저작권법 제25조" 개정 발의 (2012.11.16)

현 행	개 정(안)
④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 · 배포 · 공연 · 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 · 배포 · 공연 · 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II 대교협의 수업목적저작물제도 관련 현안 대응 경과

2011.8.9	• 하계대학총장세미나 총장 공동성명
2011.10~12	• 문광부와 협력, <수업목적 보상금 타당성 검증 연구> 연구진 구성 및 추진
2012.1.12	• 고시 개정안 촉구문 발송(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12.1.16	• 대교협, 전대협, 원대협 회장,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방문 및 부당성 의견 개진
2012.2.2	• 대학이 함께하는 지식 나눔 세상 만들기 선포식 및 대토론회: 지식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활용 촉구(대교협, KERIS, 전대협, 원대협, 교총)
2012.4.10	• 대교협 회장・사무총장, 비대위 위원장, 대학 입장 및 고시 개정 요청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전달

II 대교협의 수업목적저작물제도 관련 현안 대응 경과

2012.7.15	• 제39회 대학교육 정책 포럼 개최 및 문제점 공유
2012.11~ 2013.1	•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현황 조사 실시
2013.5.1	• 대교협 서거석 회장, 이원근 사무총장 국회 방문 및 설명
2013.5.6	• 대교협 서거석 회장, 이원근 사무총장 청와대, 교육부 방문 및 설명

III 설문조사 결과

○ 조사개요

- 조사대상: 경북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명지전문대에서 2012년 1학기 수업을 진행한 교 · 강사
- 조사규모: 759명
- 조사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웹서베이
- 조사기간: 2012년 11월 25일~2013년 1월 10일
-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 조사결과

– 어문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이용 실태: 1.8%
– 음악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이용 실태: 9.5%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정이용(fair use)에 비추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소량이 사용되고 있음

IV 대교협의 대안

1.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대학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
2. 행정소송 고시 무효 판결을 통해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인 학생 1인당 연간 기준 금액 3,132원 무효화
3. 대학 수업 시 사용된 타인의 저작물 일정량을 공정 이용 거래로 적용 (해외 사례 반영)

V 대교협의 향후 대응 계획

○ 저작권법(제25조 제4항, 제8항) 개정 촉구

- 서상기 의원 발의 법안 교문위 상정 및 통과 촉구(2013.8)
- 유기홍 의원 법안 발의 추진(2013.6), 교문위 상정 및 통과 촉구 (2013.8)

○ 행정소송 결과 대책 마련

- 4차 변론 및 최종 심리(2013.7.16)
- 패소시 항소 및 헌법소원 추진 계획

감사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주요 현안과제 토론 및 제언

MEMO

MEMO

MEMO

MEMO